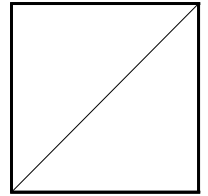


공 개



의안번호	제 281 호
의 결 연 월 일	2020. 7. 22. (제 14 차)

의
결
사
항

(주)우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 원 장 은 성 수
제출 연월일	2020. 7. 22.

1. 의결주문

(주)우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 의견제출 기한 내에 제재조치 대상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의 조치안을 그대로 확정한다.

2. 제안이유

(주)우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주)우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집중시 대출 정보 오류 등록’ 위규사항이 적발되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52조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

4. 참고사항

가. 금융감독원장이 안전 상정을 요청한 사항임

나. 관계법규 (붙임1)

- 「신용정보법」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제1항, 제52조 (과태료) 제4항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5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제1항,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4]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제1항 및 제3항,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 내지 제3항,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다. 제재내용 공개안 (붙임2)

라. 관계부서 협의

- 제13차 제재심의위원회(2020.6.25.) 심의필

<별지>

(주)우리은행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다 음 -

1. 조치내용

☐ 기관에 대한 조치

○ (주)우리은행 : 과태료 900만원* 부과

*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라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 조치사유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집중시 대출정보 오류 등록

- 법적근거 : 「신용정보법」 제52조 제4항 제5호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8조, [별표4]

2. 조치사유

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집중시 대출정보 오류 등록

☐ 「신용정보법」 제1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등록, 변경 및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부는 2018.9.18. 한국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고객 ▲▲▲ 등 138명의 개인대출정보*(145건, 28.6억원)를 오류 등록하였음**

* 오류 등록한 대출정보는 다른 금융회사 등(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공유되어 신용평가시 신용평점 및 대출한도에 부정적 영향

** 민원 등으로 본 건 검사가 시작되기 5일전에 오류 등록한 대출정보를 삭제조치 완료(2019.5.22.)

(붙임1)

관계 법규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1.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함

가. (생략)

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다~마. (생략)

2~13. (생략)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하여야 함

②~③ (생략)

제45조(감독·검사 등) ①~⑥ (생략)

⑦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경영과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음

1.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2. 임원에 대한 주의 또는 경고

3. 직원에 대한 주의 및 정직, 감봉, 견책 등의 문책 요구

4.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직무정지 또는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

5.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6. 신용정보제공의 중지

제52조(과태료) ①~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1~4. (생략)

5.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자

6~14. (생략)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함
- ⑥ (생략)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 「신용정보법」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함

- 1. (생략)
- 2. 법 제2조제1호나목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 대출,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가계당좌거래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할부금융, 시설대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그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및 한도 등에 관한 사항
- 3~5. (생략)
- ②~④ (생략)

제15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 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해서는 아니 됨

- ②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조회회사는 등록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등록되는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점검·관리하여야 함
- ③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용정보를 등록·변경·관리하여야 함
- ④~⑥ (생략)

제38조(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8조 관련)

- 1. 일반기준
- 가.~나. (생략)

다. 금융위원회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신용정보주체 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금액
타.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변경 및 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 제4항제5호	1,000만원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2.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의한 자율처리필요사항이 과거에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사실상 이사·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의 제1항 각호 외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③~④ (생략)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45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규정 제5조 및 제19조에 의한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감봉

가. 위법·부당행위를 한 자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거나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나.~라. (생략)

마.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4. 견책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거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5. 주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금융기관의 직원(이사·감사 등과 사실상 동등한 지위에있는 미등기 임원 등을 제외한다)이 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위법·부당행위를 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규정 제19조에 따라 당해 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 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③ (생략)

(붙임2)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주)우리은행

2. 제재조치일 : 2020. 7. 2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과태료 부과(900만원)
직원	○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

4. 제재대상사실

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집중시 대출정보 오류 등록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함) 제18조 등에 의하면, 은행은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려는 경우 그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는 등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를 등록, 변경 및 관리하여야 하는데도

- ○○○○○부는 2018.9.18. 한국신용정보원에 대출정보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고객 ▲▲▲ 등 138명의 개인대출정보*(145건, 28.6억원)를 오류 등록하였음**

- * 오류 등록한 대출정보는 다른 금융회사 등(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공유되어 신용평가시 신용평점 및 대출한도에 부정적 영향
- ** 민원 등으로 본 건 검사가 시작되기 5일전에 오류 등록한 대출정보를 삭제조치 완료(2019.5.22.)

< 관련법규 >

1. 「신용정보법」 제18 제1항, 제52조 제4항
2.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8조, [별표4]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소관부서	금융데이터정책과	일반은행검사국
연 락 처	02-2100-2697	02-3145-7062